

은행 가계대출 9조 급증... 대출문턱 높아진다

2분기 5대은행 대출잔액 775조
증시 활황에 신용대출 증가 확대
투자 대기자금 121.6조 10% 상승

올해 2분기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전 분기 대비 9조 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은행권의 대출 문턱도 더 높아질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2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74조9608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말(765조7290억

원)보다 9조2317억 원 증가한 규모다. 전월과 비교해서도 4조1379억 원(0.5%) 늘었다.

올해 상반기 누적 증가율이 지난해 말 대비 0.9%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최근 한달 간의 증가속도는 상반기 전체 흐름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빠른 편이다.

가계대출이 증가한 배경에는 증시 활황에 따른 신용대출 증가가 자리하고 있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08조6704억 원으로 전월보다 2조1550억 원 늘었다. 신용대출은 4월 3182억 원 감소했지만 5월(2조1741억 원)과 6월(2조1550억 원) 연이어 2조 원 이상 증가했다.

이는 최근 증시 강세와 투자 열기 확산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코스피 지수는 지난 4월 말 기준 전월 대비 30.6% 급등한 데 이어 5월 말에도 28.4% 상승하며 강세장을 이어갔다. 특히 6월 들어서는 하루 만에 지수가 10% 가까이 급락하거나 급등하는 등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단기 매매 차익이나 저가 매수를 노린 투자 수요가 늘면서 신용대출을 활용한 투자 자금 조달도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 대기자금도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 3월 말 110조889억 원이었던 투자자에

5451억 원(10%)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면서 하반기 은행권의 대출 관리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증시 강세에 따른 신용대출 증가까지 겹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은행들도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신용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심사가 지금보다 더 까다로

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에 청년미래적금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청년미래적금 신청자 누적 200만명 넘어서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신청자가 9영업일 만에 200만명을 넘어섰다.

금융위원회는 2일 청년미래적금이 오후 1시 기준 누적 201.2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3년 동안 월 50만 원 한도로 납입하는 정부지원형 금융상품이다.

가입신청은 오는 7월 3일까지 가능하며, 아직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가입신청 종료후 3주동안 자격심사를 통해 24일 신청자에게 심사결과를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심사 통과자는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 동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 개설 이후에는 매월 1000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관련 상세 정보는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나유리 기자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1100조 육박 '사상 최대'

한은, 전분기 대비 2.6조 증가
연체액 22조, 연체율 2.04%로 상승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연체 12.79% 달해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금융권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100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연체액도 처음으로 22조 원을 넘어서는 등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한국은행이 박성훈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의 금융권 대출 잔액은 1095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2조6000억 원 증가한 규모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연체 지표도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연체액은 22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조 원 늘었고, 연체율도 1.86%에서 2.04%로 상승했다.

특히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12.79%까지 치솟았고,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금융부담이 커지고 있다. /뉴스1

전문금융회사의 연체율도 3.98%를 기록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도 여전하다. 한국은행은 자영업자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이 약 1조8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차주 1인당 평균 이자 부담은 56만 원 늘어나며, 다중채무자의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은 1조1000억 원, 1인당 부담은 65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이 커지는 배경에는 장기화된 내수 부진이 자리하고 있

다는 분석이다. 매출 감소로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 대출에 의존하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금융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소상공인 폐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사업체는 97만6000개로 전년(100만8000개)보다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폐업 사유의 70.9%는 수익성 악화와 매출 부진이었으며, 매출 감소 원인으로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가 6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폐업 과정에서도 금융 부담은 가장 큰 걸림돌로 나타났다. 폐업 소상공인의 68.5%는 폐업 당시에도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평균 부채 규모는 8531만 원이었다. 폐업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대출금 상환'(45.5%)이 꼽혔다.

폐업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가계 생계비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고, 채무 부담과 재취업·재창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폐업 이후에도 금융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폐업 사업체 수가 소폭 감소했지만 이를 경영 여건 개선의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한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상당수 자영업자가 폐업 대신 대출을 통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금융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다소 줄어든 것은 경기 회복보다는 대출을 통해 영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볼 수 있다"며 "내수 회복이 지연될 경우 연체율 상승과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서금원 부원장 임명 지연 ‘낙하산 인사’ 염두한 것”

서금원 노조, 금융당국에 임명 촉구
당국 “관련된 절차 진행중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부원장 임명을 놓고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서금원이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자체 임원추천위원회를 가동해 후보군을 추천했지만, 부원장 임명 절차가 3개월째 늦어지고 있어서다. 서금원 노조가 이번 지연을 두고 ‘낙하산 인사’를 염두한 고의 지연이라고 지적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적합한 절차를 거쳐 부원장을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금원 노동조합은 지난 1일 금융당국의 서금원 부원장 임명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외부 공모를 진행하고 후보를 선정해 제출했으나, 금융당국이 3개월째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금원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에 상담 및 맞춤형 금융상품을 공급하는 정책기관으로, 부원장은 서금원 원장을 보조해 핵심 사업을

총괄 및 지원한다.

서금원의 설치 및 운영 근거가 되는 서민금융법은 서금원장이 부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제청하면 금융위원장이 이를 검토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역대 부원장은 별도의 공모를 진행하지 않고, 금융감독원 출신이 서금원장의 제청을 거쳐 관행적으로 임명됐다. 현직인 최인호 부원장도 금감원 출신으로, 지난 1월 임기가 종료됐으나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부원장 자리에 ‘낙하산 인사’가 거듭 부임하며 기관 독립성과 전문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서금원은 지난해 말 임추위 규정을 개정했다. 부원장 선임 시 외부공모를 통해 전문성 있는 인재를 모색하고, 임추위 검토를 거쳐 후보군을 선정해 임명을 제청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후보군 선정 이후에도 관련 절차가 3개월째 접어들면서, 서금원 노조는 ‘보은성 인사’를 염두한 고의지연이라고 지적했다.

서금원 노조는 성명문에서 “서금원은 임원 선임에 내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전문성을 검증하고자 임추위에 공모 절차를 신설했다”라며 “그러나 금융당국은 후보군 제출 이후에도 부원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둔 보은성 낙하산 인사를 위해 임명을 고의로 늦추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적합한 절차에 따라 임명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원장 임명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제청하고, 금융위원장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된다”면서 “법적 문제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금원의 부원장 선임 절차 단계는 인사검증 단계에서 멈춘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개정된 수칙에 따라 서금원 임추위가 최종 후보군(숏리스트)을 선정해 제출했지만, 후보군을 검토하고 최종

후보자를 확정해야 할 청와대에서 확정을 미루고 있는 것.

서금원 내부에서는 기관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임추위 절차가 ‘형식적 절차’에 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적합한 공모 절차를 거친 후보자 대신 정치권이나 당국의 입맛에 맞는 ‘보은성 인사’가 부임하는 과정에서 서금원의 인사 독립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금원 관계자는 “부원장 임명 제청은 현재 진행중인 사항인 만큼 구체적인 입장은 내놓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서금원 노조에서는 사실상의 임명권을 금융위가 쥐고 있는 만큼, 이번 부원장 임명에서도 원하는 인사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금원 노조 관계자는 “부원장은 사적 이익을 위한 자리 배분의 대상이 아니라, 서민의 경제적 자활과 재기 지원을 위한 중요한 자리”라면서 “임추위의 절차적 정당성이 아닌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인사를 결정하면 서금원의 공공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서울아파트 매매가격 상반기 5% 이상 상승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고강도 규제에도 올해 상반기에만 5%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규제를 피한 화성시 동탄이 13%나 급등했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5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29일 기준 전주 대비 매매가격지수는 0.09% 상승, 전세가격지수는 0.11% 상승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27% 올랐다. 전주(0.3%) 대비로는 상승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규제 피한 화성시 동탄 13% ↑
서울 주간 매매가 0.27% 상승
경기 전주와 같은 0.19% 올라

부동산원은 “서울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선호도 높은 역세권 및 대단지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며 “매수문제가 꾸준하며 상승거래 이어지는 등 서울 전체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경기는 전주와 같이 0.19% 상승했다. 이달부터 규제 지역으로 묶인 화성 동탄구가 1.46%로 상승률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성남 수정구(0.43%)와 수원 영통구(0.41%), 성남 분당구(0.41%) 등도 상승세가 가팔랐다.

상반기 전체로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1.65% 올라 2025년(-0.13) 대비 상승세로 전환했다. 특히 서울은 25개구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지만 5.11%나 상승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